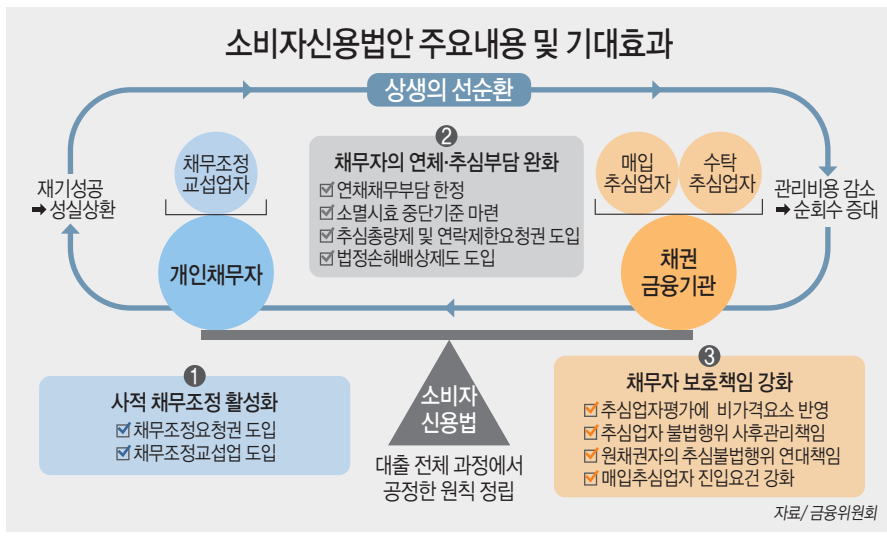
채권기관, 채무조정 요청땐 10일 내 방안 제시해야

금융위 '소비자신용법안'

주담대 연체로 인한 집경매 줄이고
채무자 전문성·협상력 보완돕는
'채무조정교섭업' 도입 하기로



자료/금융위원회

소비자신용법에는 채무자와 금융회사 간 채무조정을 위해 '채무조정요청권'과 '채무조정교섭업'이 담겼다.

우선 채무조정요청권은 채무상환을 연체한 개인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다. 개인채무자는 채무조정 요청 시 소득, 재산현황 등 상황의 곤란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채권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채권 금융기관은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따라 10영업일 내 채무조정안을 마련·제안해야 한다. 단, 채권금융기관은 채무자가 내부기준에 따른 채무조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다. 개인채무자가 채권금융기관이 제안한 채무조정안을 수락하면 채무조정 합의는 성립된다.

채권금융기관이 연체채권에 대한 기한이익상실(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경우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 및 양도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채무자와의 채무조정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채권금융기관은 채무자에게 기한이익 상실 및 양도 예정일까지 채무조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예정일 10영업일 이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예정일 10영업일 이후에 통지된 경우 도달일로부터 10영업일이 지나야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 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심사결과를 진행할 수 없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한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일도 줄인다. 채권금융기관은 주택의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경매신청 예정일까지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예정일 10영업일 이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경매는 연체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상 경과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 빚 대신 깎아주는 '채무조정교섭업' 도입

금융기관과 채무 조정 시 채무자의 부족한 전문성과 협상력을 보완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교섭업'을 도입한다. 채무조정교섭업은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고, 금융회사와 접촉해 협상이 가능하다.

단, 채무조정교섭업은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대부업·대부중개업·매입추심업·수탁추심업 등 다른 소비자신용 관련업과의 겸업을 금지한다. 채무조정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접수대행이나 채무조정안 상환현황 관리, 재무상담 등은 부수업무로 허용한다.

채무조정교섭업은 법인에 대한 등록제로 도입되며 변호사는 등록의무가 면제된다. 등록요건은 자기자본 1000만원 이상, 영업보증금, 전문성(전문인력 확보, 교육이수), 물적설비·사회적신용 등이다. 비영리법인에는 완화된 등록요건이 적용된다.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3년마다 등록 갱신의무를 부여한다.

채무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채무자로부터 교섭수수료와 성과수수료 외에는 대가 수취를 금지된다. 총 수수료는 100만원 범위 내에서 규정한다.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상환현황을 관리하거나 고지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만 수취 가능하다. 단 이 경우 채권 금융기관에서 수취하는 수수료 총액은 개인 채무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총액보다 적어야 한다.

◆ 빚 무한증식 막는다

기한이익이 상실될 경우 연체이자를 부과하던 관행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원금전체를 즉시 상환하게 하고 상환하지 못할 경우 원금 전체에 약정이자와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더라도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원금에 대해서는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없다.

채권금융기관이 개인채무자와 이에 위반되는 약정 체결할 경우 약정이자 초과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다.

또 금융기관이 회수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해 상각한 채권을 매입추심업자 등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더 이상 이자가 증식되지 않는다. 채무자도 모르게 채권이 매입추심업자에게 양도돼 이자가 급격히 불어나는 것을 막겠다는 설명이다. 앞으로는 상각 개인채권에 대해서는 장래 이자채권을 면제한 경우에만 양도가 가능하다.

이밖에도 개인채무자가 법에따른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요청한 채권의 경우 심사결과 통지전까지 추심·양도가 모두 금지된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확정돼 그 효력이 상실되기 전에는 추심은 금지하나 양도는 허용된다. 기타 채권 채무관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추심·양도가 모두 금지된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1면 '미래 IT산업 전진기지…'서 계속

"적기 채무조정 이뤄지면 채무자, 잠적 않고 재기모색"

금융위 소비자국장 일문일답

"회사별 채무조정 내용 획일화땐
소비자신용법 취지 퇴색될 수도"

이명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소비자신용법으로 추심을 제한하면 결국 채무자가 잠적·도피해 채권 금융기관의 관리비용만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오히려 추심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경우 상환을 포기하고 잠적하는 채무자가 많다"며 "채무자가 적기에 채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채무자들도 잠적·도피보다는 1차적으로 재기를 모색하게 돼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윈-윈(win-win)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명순 금융소비자국장과의 일문일답.

ㅡ채권금융기관은 채무자 상환능력과 채무 특성에 따라 내부기준을 미리 만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회사마다 기준이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에서 기준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건가.

이명순 금융위우너회 금융소비자국장. /금융위

"채무조정 내부기준은 업권별, 그리고 금융사 특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당국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되면 오히려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자율적인 채무조정 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 또 회사별로 채무조정 내용이 획일화되기 때문에 소비자신용법의 입법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 그동안 공적 채무조정 과정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나 국민행복기금에서 채무조정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하나의 예시로 이부분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ㅡ수탁·매입 추심업자가 법을 위반해 손해를 가한경우 원채권 금융기관도 추심업자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케 했다. 계열사도 아닌 위탁회사의 법위반행위까지 손해배상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고 판단하게 된 배경은.

"수탁·매입 추심업자들은 위탁에 따라 원채권 금융기관을 대신해 추심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실제 추심의 손익은 채권 금융기관이 갖게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채권 추심의 실질적 주체인 원채권금융기관이 채무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했다."

ㅡ원채권금융기관의 수탁·매입추심업자 관리책임 이행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지않게 했다. '상당한 주의'는 어느정도를 의미하나.

"원채권금융기관이 채권수탁추심업자에 대한 법상의 관리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로 판단할 수 있다. 원채권금융기관은 추심업자의 추심과정에서 소비자신용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하고, 법 위반을 발견한 경우 즉시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ㅡ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다고 했다. 해당조항을 이용해 금융기관이 채무조정을 쉽게 거절할 여지는 없나.

"소비자신용법은 채무조정 요청 시 거절만 남발하는 식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내부기준 에 대해 최소한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채무의 특성을 고려할때 자력으로 연체한 채무를상환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 증빙되고, 채무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이 이행할 수 없게된 때에는 채무조정이 제한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나유리 기자

기업용 클라우드 등 신규사업 수월해질 듯

이번 데이터센터 건설로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 '카카오 i 클라우드'와 곧 출시 예정인 기업용 메신저 '카카오 워크' 등 신규 사업 추진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카카오는 벌써부터 추가 데이터센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HN도 경기도 판교에서 운영 중인 '토스트 클라우드 센터(TCC)'에 이어 두번째 데이터센터인 'TCC2' 건립을 발표했다. 기존 데이터센터보다 4배 이상 규모가 커진다. 경남 김해시의 2만여 평 규모에 건립 예정으로 하이퍼스케일급으로 건설된다.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MS), 오라클, 구글, IBM 등 글로벌 기업의 경쟁이 치열하다. 지난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클라우드 시장의 67%를 해외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임대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운영 중이지만 자체 데이터센터를 짓기도 한다. MS는 지난 2017년 부산 강서구에 자체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을 밝힌 후 현재 건립 중이다.

전 세계에서 275개의 데이터센터를 운영 중인 디지털리얼티는 지난 7월 서울 상암동에 첫 데이터센터 건설을 위한 기공식을 가졌다. 내년 4분기 내에 완공 예정으로, 이미 국내에 제2의 데이터센터 부지도 검토 중이다.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센터는 2005년 75개였던 것에서 2019년 기준 158개로 꾸준히 증가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4차 추경예산안 이번주 국회 제출"

홍남기 부총리 "취약계층 지원 중점
실직·급여감소 등 생계 어려움 덜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9일 발표된 8월 고용동향과 관련 "취약·피해계층에 대한 촘촘한 지원에 중점을 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금주 내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고용안전망 밖에서 실직, 급여 감소, 매출 악화, 폐업 등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생계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내심 걱정이 컸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이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에서 유례없는 긴 장마와 폭우로 인한 피해가 컸고 작년 8월 고용시장이 매우 좋아 그 기저효과만으로도 전년 대비 지표가 악화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취업자 감소폭이 커지지 않은데 안도하면서도 향후 9월 고용지표 악화를 우려했다.

그는 "여러 악재가 겹쳤으나 전년 대비 취업자 감소폭 27만4000명은 7월 27만7000명 수준을 유지했다"면서도 "다만 오늘 발표된 고용지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에서 강화된 시기인 8월16일 직전 주간의 고용상황을 조사한 결과다. 다음 달 발표될 9월 고용동향에는 전국적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이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hys@